

# '사람 투자'로 일자리 해법 모색

### 정부, 미래 인재 15만명 양성...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국민 직업훈련 기회 확대... 초·중등 역량 교육 강화 일학습병행제 확대 등 통해 산업 현장 수요도 반영

정부가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 15만8000명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람 투자'를 통해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투자 3대 분야,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사람투자는 현재 및 미래 재직자의 역량을 높여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3대 분야는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으로 정리된다.

우선 일자리위는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설

립, 대학교육 혁신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AI(1000명), 소프트웨어(2만명), 에너지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에서 총 4만6000명의 유망 산업 선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 퓨처 랩(Future Lab·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시설)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유망 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2022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10만명(재직자 직부전환 6만명, 신규 인력 4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국민들의 직업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위는 현행 '내일배움카드제'를 2020년까지 누구나 장기간에 걸쳐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강좌 수를 12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도입(올해 2학기) 등을 통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초·중등 단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올해 15개교) 육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올해 5개교) 확대 등을 통해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 훈련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인재 양성 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1만5000명 규모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재직자에 대한 신기술 훈련 비중은 현행 3.6%에서 2022년 15%까지 늘릴 방침이다.

일자리위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사람투자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성과로 연결 되도록 노력하고, 단발성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전북도, 저소득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는 올해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2,087호)을 고쳐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 민생안정시책사업으로 2006년 첫 삽을 뜬 이래, 2018년까지 복권기금 등 722억원을 투입하여 총 22,240호의 노후주택을 고쳐 어려운 가족들에게

이웃의 훈훈한 사랑을 전하며 희망을 안겨 주었고, 2020년까지 24,776호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지붕과 화장실, 부엌 개량, 보일러 수리, 창호, 도배장판, 전기 등 주거 안정과 에너지 효율화에 중

점을 두고 추진해 동절기 이전까지 보수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활의욕을 높이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靑, 강원 산불 구호 4773만원 성금... 문 대통령 내외도 금일봉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과 이재민을 위해 청와대도 성금 모금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강원도 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일 오전 미국 방문에 앞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피해 구호 성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도 4773만원의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

앞서 노 실장은 이날 오전 8시 10분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강원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청와대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모금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힘을 보태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산불 재난 대응 과정에서 특히 빛났던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피해 복구 자원봉사, 구호 물품과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계신다. 피해 주민들께 큰 위안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반세기 숙원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국가가 나서야

### 임실군,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가 건설한 섬진강댐, 피해도 국가 책임이 마땅"

임실군민의 반세기 숙원사업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학계, 전북도와 임실군 등이 머리를 맞댔다.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필요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역구(임실군) 이용호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해 공학안전과장과 주민대표인 임실군 운암면 김경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당위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1965년 섬진강댐 준공 이후 교통부절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이로 인한 낙후현상을 재조명하고 수변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섬진강댐은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연간 3억 7천만톤의 관개용수와 150mw(메가와트)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국내 건설된 댐 중에 유일하게 수변도로가 개설되어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피해가 50여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섭 국장은 "국가 주도로 섬진강 댐이 건설됐는데, 댐 재개발사업에서 댐 연결도로가 시행될 줄 알았지만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임실군 주민들과 임실을 찾아 온 관광객 등은 50년 넘게 수십 킬로미터를 우회하며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1965년대에 설치됐어야 할 연결도로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예산반영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섬진강댐 옥정호는 임실군민의 가슴이픈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 댐 건설로 인해 인근 2,780세대에 19,85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고,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와 교통단절의 불편함 등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임실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심 민 군수를 중심으로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토 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의거,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추진에 동력을 잃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임실군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50여년 전에 국가가 필요해서 댐을 만들었고, 그로 인한 온갖 피해는 임실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았느냐"며 "부속도로인 옥정호 수변도로 만큼은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랜세월 임실군민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비 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실=전홍명 기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0일 서울 웨라호텔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이 주최하는 제24회 조찬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은 호남 미래포럼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